

수원시 저출생 현황과 대응사례 연구

이영안, 한연주, 최고훈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yalee@suwon.re.kr

연구기획팀 팀장, joanna1118@suwon.re.kr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ghchoi@suwon.re.kr

요약

-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8명에 그쳐 주요도시 중 최하위권이며, 조출생률 또한 감소 추세로 5.6명을 기록함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대부분은 현금성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을 다수 활용하고 있음
- 국외사례로 일본의 임신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사업, 미국의 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및 돌봄 정책,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등이 있음

[표] 국외 주요 양육 지원 정책

지역	구분	주요 사업
일본	임신 출산 지원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일·가정 양립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
	양육 지원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미국	아동 청소년 지원	미국 최초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설립에 2천만 달러 지원
독일	유아교육/보육	2023년 6월까지 독일 연방정부가 6,000개의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지원
	돌봄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등
스웨덴	유아교육/보육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 도구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등

정책제안

- 수원시의 인구구조의 특징 및 차별화된 자원을 파악하여 수원시민의 수요와 자원을 결합하는 정책 개발 필요
- 새로운 정책 개발 시 타 지방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과 달리 일대일 개별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법 고려
- 일본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주형(직접 방문하고 면담해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멘토링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수행) 정책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에서와 같이 정신건강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

01 서론

연구 배경

□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0.81명을 기록했으며, 2년 뒤인 2023에는 0.72명을 돌파함
 - 옥스퍼드대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지속될 경우 2750년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함(연합뉴스, 2023.05.17. 보도자료)
- 수원시의 2024년 2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8명 줄어든 0.68명이며, 2040년에는 인구가 119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중앙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정부는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함
 -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인구학적 경로로 나뉨
 -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①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②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③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④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이 꼽힘(관계부처합동, 2020)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변경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함
 - 총 5가지 핵심 분야(① 돌봄·교육, ② 일·육아 병행, ③ 주거, ④ 양육비용 지원, ⑤ 건강)에 따른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방향을 선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03.28. 보도자료)

□ 수원시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생산연령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주로 주거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흐름, 지역의 특성, 가족구성 등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정책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존재함(이선형, 2022)
 - 지방정부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군 자체사업이나 지역특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양육정책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 사안이며, 수원 또한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산업사회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은 더 이상 가정 내 여성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여겨짐
- 또한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함
- 정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양육정책에 자원을 집중하여 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 현실에 맞추어 양육정책을 보완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는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수원시의 특성에 기초한 저출생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내·외 양육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원시 저출생 대응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내·외 양육 지원 정책 사례를 파악하여 저출생 시대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둠
- 특히 양육정책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가족이 자녀를 출산(혹은 입양) 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신윤정 외, 2013)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산(혹은 입양)을 통해 가족 내 구성원이 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보편적으로 영유아기-아동기로 만 0세~만 18세에 해당)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02 수원시 저출생 현황 분석

수원시 합계출산율

□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하여 경기도 내 주요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출산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며, 국가 간 출산력 수준 비교 시에 자주 활용되는 지표임
- 5년 전인 2018년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에 근접하였으며, 2018년의 수원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화성시(1.31명)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용인시(0.98명), 성남시(0.91명), 그리고 고양시(0.85명)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0.89명, 2020년 0.80명, 2021년과 2022년 0.77명, 그리고 2023년 잠정치로 0.68명에 그쳐 주요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게 됨

□ 2018년 이후부터 전국, 경기도 및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요도시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1명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인 저출생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2023년 잠정치로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기록적인 수치이며, 경기도는 0.77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이 경기도 평균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주요도시 가운데 화성시는 0.98명으로 가장 높고, 용인시 0.74명, 고양시 0.70명 순임([표 1] 참조)

[표 1] 합계출산율 추이(2018년~2021년)

(단위: 명(가임여성 1명당))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전국	1.00	0.92	0.84	0.81	0.78	0.72
경기도	1.00	0.94	0.88	0.85	0.84	0.77
수원시	0.99	0.89	0.80	0.77	0.77	0.68
성남시	0.91	0.85	0.77	0.76	0.76	0.67
고양시	0.85	0.80	0.79	0.79	0.79	0.70
용인시	0.98	0.94	0.91	0.87	0.84	0.74
화성시	1.31	1.20	1.09	1.01	0.96	0.98

자료: 통계청(2018~2022), 인구동향조사, KOSIS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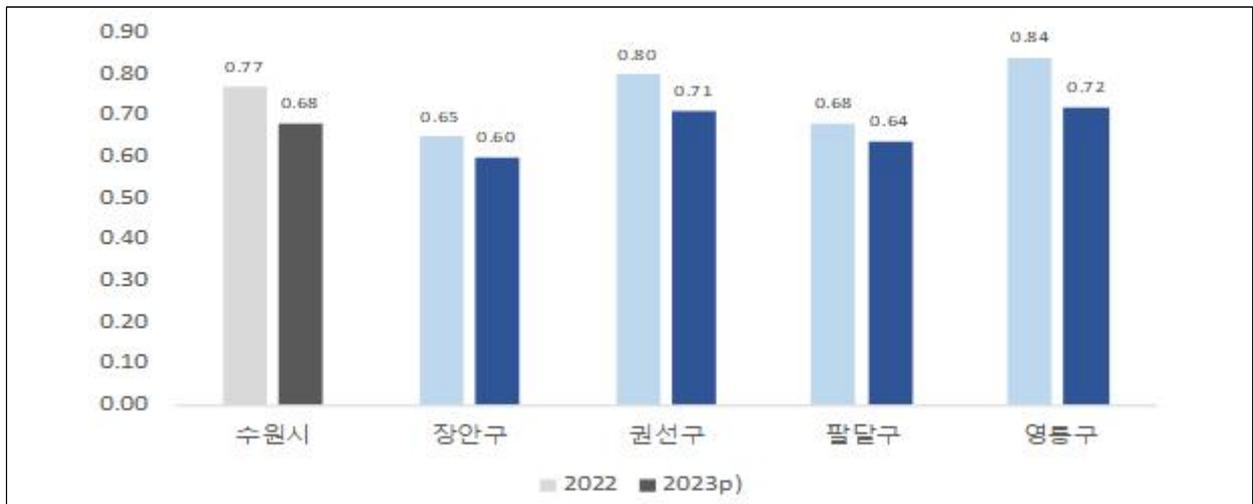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2) p): 잠정치

□ 수원시 구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22년 수원시 전체 0.77명이고, 영통구 0.84명, 권선구 0.80명, 팔달구 0.68명, 장안구 0.65명 순으로 나타나 영통구가 가장 높고 장안구가 가장 낮았음

○ 2023년 잠정치로는 수원시 전체 0.68명이고, 4개 구 모두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영통구 0.72명, 권선구 0.71명, 팔달구 0.64명, 장안구 0.60명으로 합계출산율의 순위는 변함이 없으며, 팔달구와 장안구는 수원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그림 1] 참조)

[그림 1] 수원시 구별 합계출산율(2022년, 2023년)

(단위: 명(가임여성 1명당))



자료: 통계청(2022, 2023), 인구동향조사, KOSIS DB웹서비스

주: 1)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2) p): 잠정치

□ 수원시는 30~34세 76.4명이고, 35~39세는 45.1명으로 나타나, 두 연령대 모두 연령별 출산율이 전국보다는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음

○ 연령별 출산율은 출산력을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로, 연령대별 출산 수준 즉 어느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1년 간 발생한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당해 연령의 여성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 2022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 살펴보면, 전국은 30~34세 여성인구에서 가장 많은 1,000명당 73.5명의 출생아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39세 44.1명, 25~29세 24.0명 순임
- 경기도는 30~34세 80.0명, 35~39세 47.8명, 그리고 25~29세 25.7명으로 세 연령대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연령별 출산율을 경기도 주요도시별로 살펴보면, 화성시의 30~34세의 출산율이 97.6명으로 가장 높고, 고양시는 72.7명으로 가장 낮음
- 35~39세는 고양시가 52.3명으로 가장 높고, 수원시가 45.1명으로 가장 낮음
- 25~29세는 화성시가 34.7명으로 독보적으로 높고, 성남시가 17.0명으로 가장 낮음([표 2] 참조)

[표 2]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022년)

(단위: 명(가임여성 1명당), 명(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구분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0.78	0.4	4.1	24.0	73.5	44.1	8.0	0.2
경기도	0.84	0.3	4.0	25.7	80.0	47.8	8.7	0.2
수원시	0.77	0.2	3.1	19.3	76.4	45.1	7.5	0.2
성남시	0.76	0.2	2.1	17.0	73.6	49.0	8.9	0.1
고양시	0.79	0.2	2.2	19.8	72.7	52.3	8.3	0.2
용인시	0.84	0.1	3.0	19.6	84.6	49.3	8.7	0.3
화성시	0.96	0.1	5.0	34.7	97.6	46.7	8.5	0.2

자료: 통계청(2022), 인구동향조사, KOSIS DB웹서비스

주: 1) 연령별 출산율: 1년 간 발생한 모(母)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수를 해당 연령별 여성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

2)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수원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 수원시의 혼인건수는 2019년 6,026건이었으나, 2023년 5,523건으로 감소하였음

- 전국, 경기도 및 경기도 주요도시의 혼인건수의 특징 중 하나는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혼인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들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정도 회복되는 상황임
 - 다만 성남시와 고양시의 혼인건수는 2023년이 되어서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1)(2019년~2023년)

(단위: 건수, 명(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혼인건수	조혼인율								
전국	239,159	4.7	213,502	4.2	192,507	3.8	191,690	3.7	193,657	3.8
경기도	62,356	4.8	57,814	4.4	54,658	4.1	54,178	4.0	54,221	4.0
수원시	6,026	5.1	5,539	4.7	5,229	4.4	5,111	4.3	5,523	4.6
성남시	4,453	4.8	4,269	4.6	3,565	3.8	3,865	4.2	3,757	4.1
고양시	4,440	4.2	4,188	3.9	4,172	3.9	3,905	3.6	3,671	3.4
용인시	4,670	4.5	4,232	4.0	3,529	3.3	3,504	3.3	3,773	3.5
화성시	4,788	6.1	4,547	5.5	4,331	5.0	4,124	4.6	4,610	5.0

자료: 통계청(2019~2023), 인구동향조사, KOSIS DB웹서비스

주: 1) 조혼인율=(특정 1년간의 신고된 혼인건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2)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집계

수원시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 수원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6,814명, 2021년 6,50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6,558명으로 미미하게나마 상승하였음

 - 저출생 경향은 해마다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전국의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249,186명에 불과함
 - 경기도의 출생아 수 또한 2019년 83,198명에서 감소를 거듭하여 2022년에는 75,323명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상승으로 인해 2022년 현재 주요도시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이고, 그다음은 화성시(6,445명), 용인시(5,691명), 고양시(5,626명) 순임
 - 성남시의 출생아 수는 4,966명으로 5천명에 미치지 못하였음
- 수원시의 조출생률은 2019년 6.6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 5.8명으로 급락하였고, 이후 감소세를 거듭하여 2022년에는 경기도 평균과 동일한 5.6명으로 나타남

 - 인구 규모의 영향에 상관없이 출산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조출생률이 있으며, 이는 1년 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함
 - 2019년 전국의 조출생률은 5.9명이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4.9명에 그침
 -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조출생률이 높지만 2019년 6.4명에서 2022년 5.6명으로 감소하였음
 - 경기도 주요도시의 조출생률도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가장 높은 지역인 화성시는 7.2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고, 그 다음은 수원시(5.6명), 성남시(5.4명), 고양시와 용인시(각각 5.3명) 순임([표 4] 참조)

[표 4]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1)(2019년~2022년)

(단위: 명, 명(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구분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수	조출생률	출생아수	조출생률	출생아수	조출생률	출생아수	조출생률
전국	302,676	5.9	272,337	5.3	260,562	5.1	249,186	4.9
경기도	83,198	6.4	77,737	5.9	76,139	5.7	75,323	5.6
수원시	7,791	6.6	6,814	5.8	6,508	5.5	6,558	5.6
성남시	5,808	6.2	5,110	5.5	5,024	5.4	4,966	5.4
고양시	5,538	5.3	5,544	5.2	5,591	5.2	5,626	5.3
용인시	6,463	6.2	6,252	5.9	5,990	5.6	5,691	5.3
화성시	7,158	9.1	6,842	8.2	6,551	7.5	6,445	7.2

자료: 통계청(2022), 인구동향조사, KOSIS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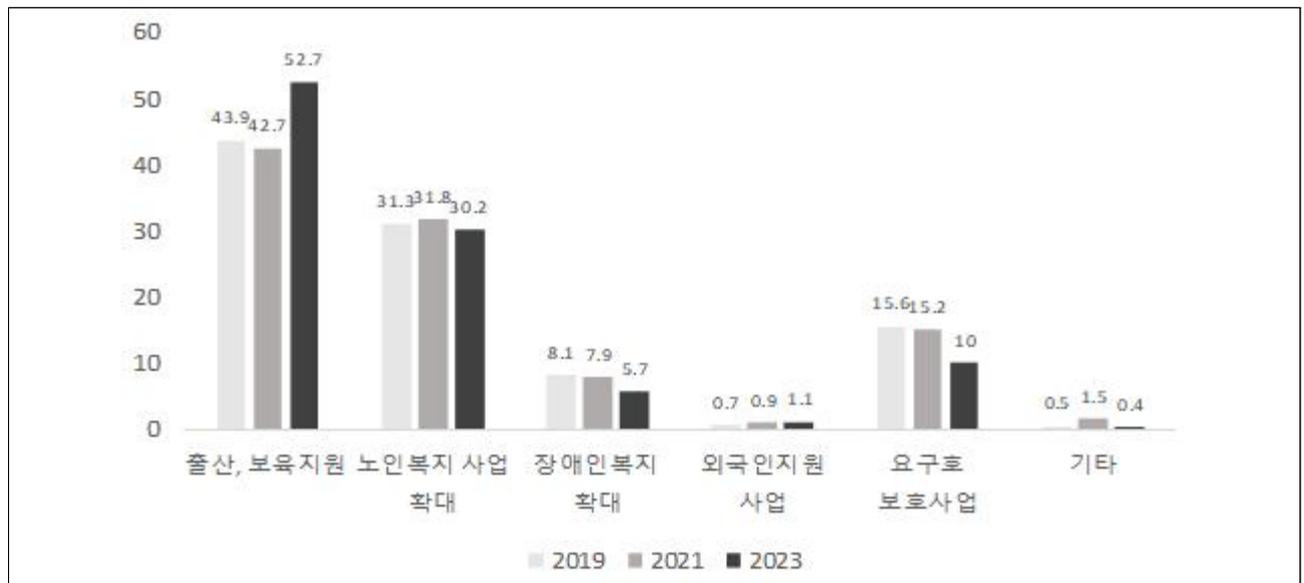
주: 조출생률=(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출생에 대한 시민 인식

- 저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혼인건수와 조혼인률, 그리고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등 출산 관련 객관적 통계지표의 분석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저출생과 저출생 극복정책을 둘러싼 시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주관적 지표를 분석하는 것 또한 정책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
- 수원시민 대상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중 가장 많은 응답은 2019년, 2021년, 그리고 2023년 조사에서 모두 '출산, 보육 지원'으로 나타났음(그림 2 참조)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각각 43.9%와 42.7%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는데, 2023년에는 52.7%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로 출산과 보육을 답하였음
 - '출산, 보육 지원'이 수원시의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라는 응답은 2019년(남성 43.0%, 여성 44.8%)과 2021년(남성 42.6%, 여성 42.9%)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응답했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여성(51.2%)보다 남성(54.0%)이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 확대, 요구호보호사업, 장애인복지 확대 순이었음(표 5 참조)

[그림 2] 수원시민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2019년, 2021년, 2023년)

(단위: %)



자료: 수원시(2019, 2021, 2023),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표 5] 수원시민 성별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2019년, 2021년, 2023년)

(단위: %)

구분	계	출산, 보육지원	노인복지 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 확대	외국인 지원 사업	요구호 보호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등)	기타	
2019	전체	100.0	43.9	31.3	8.1	0.7	15.6	0.5
	남성	100.0	43.0	30.7	8.7	0.5	16.5	0.5
	여성	100.0	44.8	31.9	7.4	0.8	14.7	0.5
2021	전체	100.0	42.7	31.8	7.9	0.9	15.2	1.5
	남성	100.0	42.6	32.1	7.7	0.8	15.3	1.6
	여성	100.0	42.9	31.5	8.1	0.9	15.2	1.3
2023	전체	100.0	52.7	30.2	5.7	1.1	10.0	0.4
	남성	100.0	54.2	28.7	6.0	1.0	9.6	0.5
	여성	100.0	51.2	31.7	5.4	1.1	10.4	0.2

자료: 수원시(2019, 2021, 2023),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 수원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2022년 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의 수원시민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하는 것이 좋다’는 36.5%이고,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13.9%에 불과하였음
- 4년 전인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결혼이 개인의 선택사항이라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40.7%에서 4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4.6%에서 36.5%로 증가하였고,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6.4%에서 1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이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여성은 남성(38.0%)보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6.5%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인 ‘하지 않는 것이 좋다’(남성 3.5%, 여성 5.0%)는 응답과 ‘하지 말아야 한다’(남성 0.5%, 여성 1.3%)는 응답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여성의 응답은 2018년 43.0%였는데 2022년에는 46.5%로 증가하였고, 결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여성의 응답은 2018년 14.4%였으나 2022년에는 11.5%로 감소하였음([표 6] 참조)

[그림 3] 수원시민 결혼에 대한 견해(2018년, 2022년)

(단위: %)



자료: 수원시(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회조사 조사 중단 및 보고서 미발간

[표 6] 수원시민 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2018년, 2022년)

(단위: %)

구분	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18	전체	100.0	16.4	34.6	40.7	4.5	1.5	2.2
	남성	100.0	18.4	35.8	38.5	3.6	1.0	2.6
	여성	100.0	14.4	33.5	43.0	5.3	2.0	1.8
2022	전체	100.0	13.9	36.5	42.3	4.2	0.9	2.3
	남성	100.0	16.2	38.9	38.0	3.5	0.5	2.9
	여성	100.0	11.5	34.0	46.5	5.0	1.3	1.7

자료: 수원시(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회조사 조사 중단 및 보고서 미발간

□ 수원시민들은 ‘자녀양육의 부담’(32.3%)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수원시민 3명 중 1명은 자녀양육의 부담이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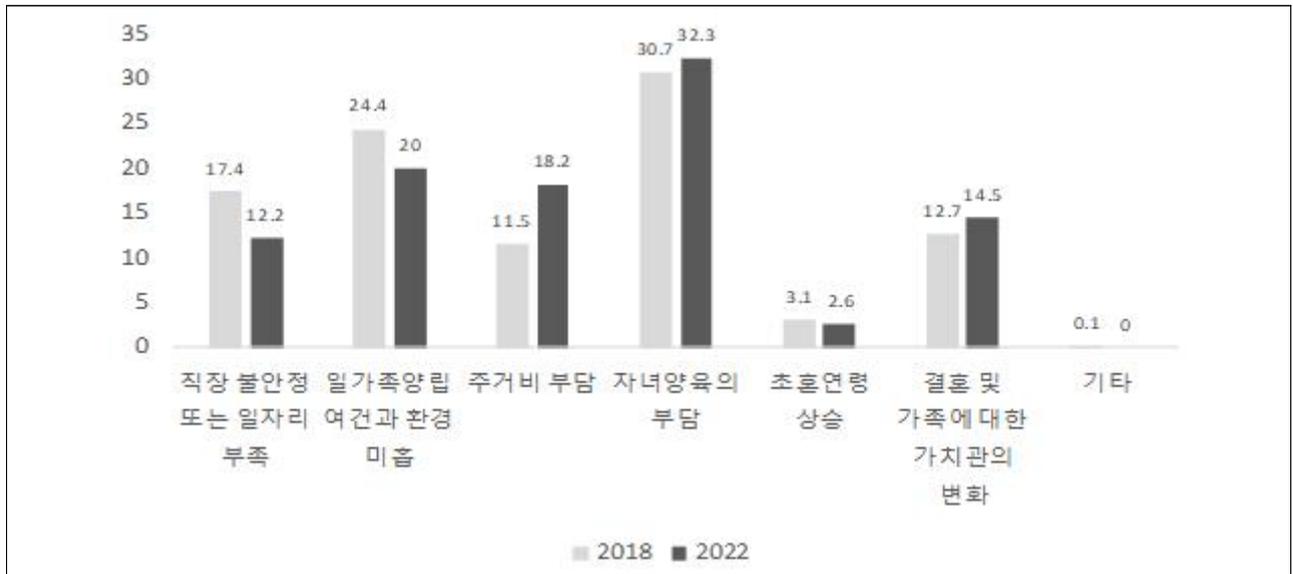
○ 그 다음은 ‘일가족 양립여건과 환경 미흡’(20.0%), ‘주거비 부담’(18.2%),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14.5%) 순으로 나타남

- 4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자녀양육의 부담’(30.7%→32.3%), ‘주거비 부담’(11.5%→18.2%),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12.7%→14.5%)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일가족 양립여건과 환경 미흡’(24.4%→20.0%),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17.4%→12.2%)이라는 응답은 감소하였음([그림 4] 참조)

- 2022년의 여성은 남성보다 ‘일가족 양립여건과 환경 미흡’(남성 17.8%, 여성 22.3%), ‘자녀양육의 부담(교육비 부담)’(남성 30.7%, 여성 33.9%) 등의 응답이 높고, 남성은 여성보다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남성 21.9%, 여성 14.6%),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남성 12.5%, 여성 11.9%) 등의 응답이 높았음
- 여성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자녀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이 2018년 31.2%에서 2022년 33.9%로 증가하였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응답 또한 12.2%에서 14.4%로 증가함
- 남성은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이 2018년 12.6%에서 2022년 21.9%로 대폭 증가하였고, 남성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응답도 13.3%에서 14.6%로 증가하였음([표 7] 참조)

[그림 4] 수원시민 저출산의 원인(2018년, 2022년)

(단위: %)



자료: 수원시(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회조사 조사 중단 및 보고서 미발간

[표 7] 수원시민 성별 저출산의 원인(2018년, 2022년)

(단위: %)

구분	계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주거비 부담 (비싼 주택가격 등)	자녀양육의 부담 (교육비 포함)	초혼 연령 상승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기타	
2018	전체	100.0	17.4	24.4	11.5	30.7	3.1	12.7	0.1
	남성	100.0	18.9	22.0	12.6	30.2	2.9	13.3	0.2
	여성	100.0	16.0	26.9	10.4	31.2	3.3	12.2	0.1
2022	전체	100.0	12.2	20.0	18.2	32.3	2.6	14.5	0.0
	남성	100.0	12.5	17.8	21.9	30.7	2.4	14.6	0.1

구분	계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주거비 부담 (비싼 주택가격 등)	자녀양육의 부담 (교육비 포함)	초혼 연령 상승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기타	
2022	여성	100.0	11.9	22.3	14.6	33.9	2.9	14.4	0.0

자료: 수원시(2018, 2022),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회조사 조사 중단 및 보고서 미발간

03 양육 지원 정책 사례 분석

중앙정부 양육 지원 정책

1) 개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 하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움([표 8] 참조)

[표 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대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주요 세부과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긴급돌봄 체계화, 온종일돌봄 확대 영아수당 도입, 첫 만남 꾸러미, 아동수당, 가구별 아동 지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강화, 모자보건법 개정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 노인 건강검진 강화, 방문형 보건의로 활성화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학점제 도입,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기반 구축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인구통계상 연령기준 검토, 세대 간 소통 강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출산 및 양육크레딧 도입 검토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고령친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 이 중 회색 음영이 표 중 볼드(굵은)로 표시한 과제가 양육 지원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제임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그러나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선화하였고,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라는 목표를 세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
- 목표와 전략 아래 양육 지원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주요 과제는 ‘츄츄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이며, 2023년 주요 시행계획 및 과제는 아래 [표 9], 각 정책수단별 주요 과제는 [그림 5]와 같음

[표 9]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및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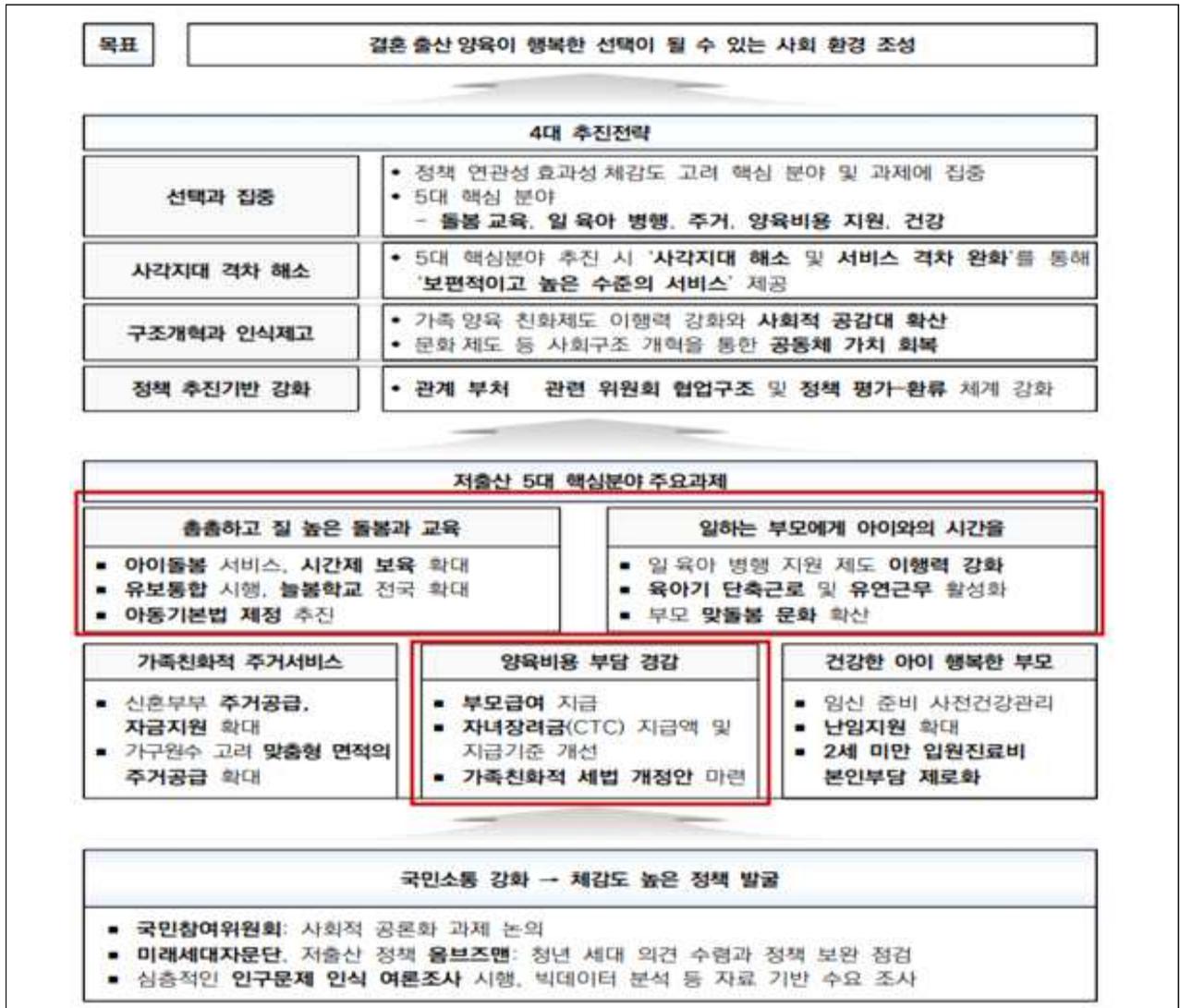
5대 핵심분야	2023년 시행계획 및 주요 과제	3. 28. 위원회 발표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과제1)
츄츄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육 확충 •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시행 •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급여 지원 • 육아기 단축 근로 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육아 병행 지원제도 이행력 강화
양육비용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도입 • 아동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지급기준 개선 •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지원 확대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 다자녀가구 통합공공임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2권 p.1315

주: 1) 2023년 시행계획으로 제출된 과제들은 2022년에 예산편성이 완료되었기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28일)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과제들은 2023년 시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음

2) 이 중 회색 음영이 표 중 볼드(굵은)로 표시한 과제가 양육 지원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제임

[그림 5]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2023년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1권 p.16

주: 이 중 양육 지원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출산 정책 주요 과제는 붉은 색 네모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제임

2) 사회서비스

□ 공보육 강화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정책 대상) 영유아 및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추진배경)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 (주요 과제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 임차 등 다양한 사업방식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건에 적합한 확충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00개

이상 확충

-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 연구 결과를 발표
-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소규모 어린이집(3~5개)을 하나의 그룹을 묶어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협력 모델을 시범 운영
- (국공립 유치원 확충) 시도교육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아 배치 계획에 기반을 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추진 및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확대(대상, 시간). 유아와 학부모 통학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 추진
- (누리과정 지원) 유아 학비 지원 시 2021년 인상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원비 인상을 상한률(2021학년도 0.8%)을 준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 지원
-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既) 선정된 공공형 유치원 운영 지속 지원

□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 (정책 대상) 유아, 초등학생 및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 (추진 배경) 아이돌봄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한 상시 서비스 강화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서 나 홀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체계화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 (주요 과제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역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 보수 전문교육 및 인적성 검사 실시 등 인력관리 체계화
 - 인프라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영아 지원 강화: 영아 양육 가구의 자부담 완화, 지원 범위 확대,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등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검토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 친환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2022년 376개소→2023년 395개소)
 - (긴급돌봄 체계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는 키움센터)는 휴원 중에도 긴급돌봄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
 - (시간제 보육 확대) 영아기의 다양한 보육수요(3~4시간 단시간 보육 필요 등)를 고려하여 장시간 보육 이외 시간제 보육 지속 확대 및 이용률 제고
 - 다양한 형태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내 시간제 보육반 의무화 ②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기관 ③ 기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전담기관 전환 등)의 시간제 보육 사업 시범 사업 실시
 - (보완적 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과 부모교육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양육 정보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정책 대상)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 (추진 배경) 늘봄학교 추진 및 수요자 온종일 돌봄 확대를 시행하여 학교 안과 학교 밖 초등학생 대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양육자의 경력 단절 해소
- (주요 과제 내용)

- (늘봄학교(초등 종일제교육) 추진)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초등 종일제교육
 - 방과 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교육 등)+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제공
 - (저학년) 단순 돌봄→프로그램 참여 확대, (고학년) 방과후 수업 위주→틈새돌봄

-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시대 변화에 맞춰 AI, 코딩 등 미래 교육 신수요 분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 제공
- (돌봄 유형 다양화)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20시까지 확대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과밀 지역 등에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거점형 돌봄'을 운영하여 접근성 제고
- (운영체제 개편) 단위 학교 중심 운영 방식을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 경감
 - *기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중앙 1개, 시도 165개)를 방과후 늘봄학교지원센터로 개편
- (시범 운영) 시범교육청(5개) 선정 운영(인력재정 집중 지원)으로 지역별(도시형, 농촌형 등) 성공모델 발굴·확산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현장 실수요를 반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2023년에는 20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현행) 학기 중 14시~19시, (변경) 학기 중 14시~20시
 - 매 학기 이용 아동별 돌봄 필요 시간을 조사하여, 돌봄 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조정. 하지만 해당 날짜에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20시까지 운영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
 - 2023년에는 시범 사업 대상 센터를 45개소로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의 돌봄 수요를 충족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제고) 개인 시설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 강화
 -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필수 운영시간 연장(기존 19시까지→변경 20시까지)을 통한 촘촘한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사자 처우개선, 노후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등 돌봄환경 개선, 이용자 만족도 및 아동학대 사례 반영 등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

3) 사회보험

□ 육아휴직 지원 신설 및 확대

- (정책 대상) 영아 및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 (추진 배경) 출산 후 영아기 부모의 양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지원은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며 여성의 고립 육아 해소 및 경력 단절 예방

○(주요 과제 내용)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하위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2022년도에 시행 후 2023년도에 지속
 - 3+3 육아휴직이란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인 부부 근로자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근로자 모두 통상임금 100% 수준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노동부, 2022)
-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최대 합산 3,900만원 지원(관계부처 합동, 2024)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소득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확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0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 시 해당 기업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급
 - 기존에는 대체인력 미채용 시 월 30만원을 지급하였음. 기존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향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중소 및 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만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 공제

□ 출산 후 급여 지급 및 근로자 보호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 감소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모성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 급여 지원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출산 후 근로 여부, 소득 사실 및 출산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금 지급

4) 사회수당

□ 부모급여(영아수당) 도입 및 정착

- (정책 대상) 영아 및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 (추진 배경) 2022년에 도입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주요 과제 내용
 - (추진 방안) 2022년부터 지급한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
 - (지급 대상) 만 0~1세 아동(24개월 간 지급)
 - (지급 금액)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사업 기간)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2023년 부모급여에 영아수당 포함, 2024년 제도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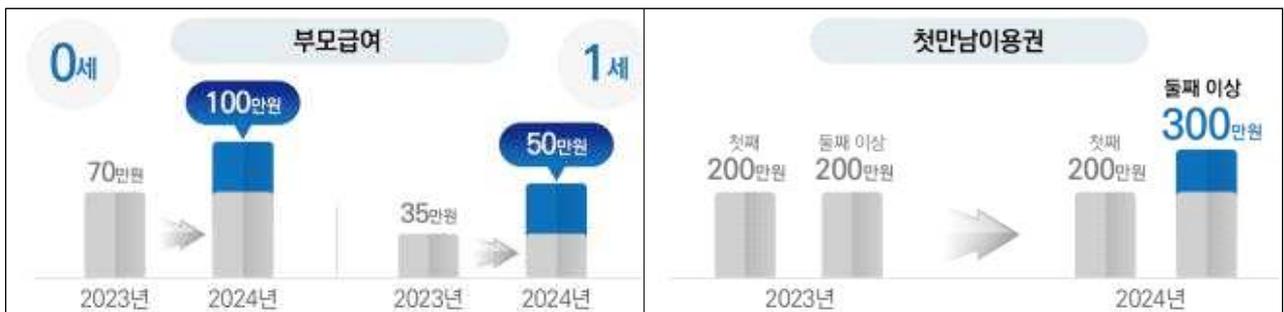
□ **첫만남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확대 지급**

- (정책 대상) 영아 및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 (추진 배경) 기존 출산 바우처의 확대를 통해 임신 및 출산 기간의 의료비용 경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 주요 과제 내용
 - 출산 바우처 확대 개편: 2022년부터 총 300만원으로 확대(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인상: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다태아 100→140만원, 분만취약지는 20만원 추가지원

□ **첫만남이용권: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바우처 지급**

- (정책 대상) 영아 및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 (추진 배경) 출산 후 생애 초기 자녀 양육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 주요 과제 내용
 - 2023년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3.3만명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함.
 -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그림 6] 참조)

[그림 6] 2024년 양육지원 비용(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4).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정책 대상)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 (추진 배경)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 (주요 과제 내용)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수급 관리 지속

□ 자녀장려금(CTC) 세제 지원 확대

- (정책 대상)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 (추진 배경) 저소득층 자녀 양육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심화
- (주요 과제 내용)
 - 지급 대상 확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 공제금액 인상: 둘째 자녀 세액 공제금액 5만원 인상하여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원 (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정책 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 (추진 배경)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 (주요 과제 내용)
 - 기초 차상위 가구 학생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교육 소외 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이동성 제고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 부담 완화
 -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지원, 둘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지방정부 양육 지원 정책

1) 개괄

□ 지방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은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함께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음

- 아래 [표 10]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수원시가 포함된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및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및 사회수당 지급 정책을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통 사업 이외 지방정부별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0] 경기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공통 세부사업(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정책수단 유형 (정책대상)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 인구 주간, 정기회의, 저출생 극복 공동캠페인 추진 등	-
어린이집 확충	•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회서비스 (영유아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 유치원 유아학비 138,170명, 556,048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127,651명, 458,523백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의 어린이집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4개 분야 모니터링 운영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 간식비, 놀이배움터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원대상: 시군(40개소) • 지원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 양육 공백 발생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영유아, 초등학생 및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돌봄교실운영	• 맞벌이 및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 및 교육 기회 확대 • 1~2학년 대상 맞춤형 오후 돌봄 • 3~6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 사업내용: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돌봄센터 인건비, 설치비, 운영비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1인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사회수당 (영유아, 초등학생 및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보호자))
부모급여	• 2022년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 월 35~70만원 지급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2023, p.340~341)

주: 경기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공통 세부 사업(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 양육 지원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을 발췌하여 정책수단 및 정책대상별로 재구조화

2) 수원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1) 수원시 출산 지원 정책

□ 수원시에서 자녀출산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급여에 집중하고 있음

○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이 있음

- 정부에서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보건복지부, 2024)

- 출산시 최초 1회 바우처 지급(2024.01.0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하는 300만원)

- 또 다른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음
 - 출산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둘째아부터 현금으로 지급함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4개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김포시, 안성시)는 둘째아부터, 3개 지자체(부천시, 시흥시, 양주시)는 넷째아부터, 그 외 24개 지자체는 첫째아부터 지원함
 - 이외에도 신생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이 있음

□ 출산 이후 산모나 아동에게 현금 혹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도 존재함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있음
- 다자녀 출산 여성에게 한약제조 할인을 제공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또한 존재함(표 11] 참조)

[표 11] 수원시 출산 지원 정책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국)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바우처 (현금)지급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출산지원금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출산: 500천원 • 셋째 출산: 2,000천원 • 넷째 출산: 5,000천원 • 다섯째 이상 출산: 10,000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2세 미만의 아동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지원 포인트 생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추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11만원 지원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	저소득층	출산 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공직자 가족경사 격려용품 지원	출생준비 중인 공직자	임산부용품과 신생아용품 지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제조 시 최대 10만원 할인
출생 축하카드	• 출생신고 시	• 축하카드 배부

자료: 1) 첫만남이용권(미디어와이, 2024.01.16. 보도자료)
 2)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복지로, 2024.03.27. 인출)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수원시 보건소, 2024.03.27. 인출)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뉴스포털, 2024.03.27. 인출)
 5)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수원특례시 발달장애 종합정보 시스템 새빛이음, 2024.03.27. 인출)
 6)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 공직자 가족경사 격려용품 지원,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출생 축하카드(수원시 내부자료)

(2) 수원시 양육 지원 정책

□ 양육 지원 정책은 아동의 나이나 교육 여부에 따라 현금성 급여나 수당을 제공하고 있음

-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는 '부모급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는 '0세~5세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지원'을 제공 중임
- 보육시설 및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의 가정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서비스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부모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시간제보육 사업' 등이 있음
-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장난감 구입과 관련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더불어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육아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또한 존재함([표 12] 참조)

[표 12] 수원시 양육 지원 정책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모급여(국)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가정양육수당(국)	•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만24개월 이상~만86개월 미만)	• 0~11개월: 200천원 • 12~23개월: 150천원 • 24~86개월 미만: 100천원
아동수당(국)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1인당 월 10만원
아이돌봄 지원(국)	• 연령기준: 12세 이하 • 돌봄기준: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기타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36개월 이하의 영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0세~5세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 보육시설 이용 아동(0~5세아)	• 보육료 월 540천원~280천원 지원
시간제보육	• 6~36개월 미만 영아(가정양육수당 수급)	• 1개소(권선휴점)
다함께돌봄사업 및 학교돌봄터 사업	•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교생	• 방과 후에 돌봄센터 이용 서비스 제공
아이사랑놀이터	•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 (일부는 12~48개월로 제한)	• 8개소(정자점, 호매실점, SK아트리움점, 파장 동행정복지센터점, 권선휴점, 영통점, 행궁점, 가족여성회관)
장난감도서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	• 9개소(영통관, 행궁점, 원천점, 매교점, 창룡관, 정자점, 권선휴점, 호매실점, 조원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6~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월 66시간 내 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2개소)	• 공직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직자에게 영유아 보 육 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 맞벌이 가정 부모의 초등학교 1~3학년 자녀 대상	• 육아정보 공유 및 품앗이 활동공간 제공 맞벌이 가정 초등돌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참여 부 모 및 자녀 통합 프로그램 등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지원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 중이며, 수원 시 주민등록 등재된 다자녀(넷째이상)	• 입학준비금(10만원), 현장학습비(10만원)를 어 린이집에 지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육아지원서비스)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 육아 지원	•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돌봄공동체지원 사업	• 아동돌봄 공동체 단체·기관	• 방과 후 아동돌봄 공간 운영을 위한 돌봄 프로그 램 지원(초등학교생 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 18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지원

자료: 1)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보건복지부, 2024.03.26. 인출)
 2)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 지원센터, 2024.03.26. 인출)
 3) 공동육아나눔터(수원특례시 홈페이지, 2024.03.27. 인출)
 4) 돌봄공동체지원사업(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4.03.27. 인출)
 5) 아동수당, 아이돌봄 지원, 0세~5세아 보육료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및 학교돌봄터 사업,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지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수원시 내부자료)

3) 특례시(혹은 시)별 별도 추진 저출산 정책

□ 수원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주로 다자녀 가구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계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대부분 현금성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으로 다수 활용하고 있음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 명시된 자체 사업 목록

중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자체 사업을 정리하고,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공통 세부사업(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목록 중 창원특례시의 자체 사업을 정리함

(1) 고양시

□ (사회수당)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¹⁾

- (지원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한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 (사회부조)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모·부 가족
 - 36개월 이하의 자녀 양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예정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
- (지원 내용) 양육생계비 월 100만원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 후 자녀 연령 36개월까지 최대 3년 간 지원
- (신청 자격)
 - 기존 복지대상자(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는 지원 조건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 신규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맞춤형급여 등 복지급여 우선 신청

□ (사회수당)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 (지원 내용)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 (지원 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자격)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 거주

□ (사회수당_현물) 다복꾸러미 지급

- (지원 대상)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지원물품 패키지 4종 중 택1
 - 패키지 A: 플레이매트 1매(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방수 천가방가제 손수건 4장

1) 고양시청 홈페이지, 2024.03.24. 인출

- 패키지 B: 오가닉 아기옷 세트(장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내복, 손싸개)+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C: 국산 들기름 1병(250ml)+작은 담요 1매(82cm*82cm)+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D: 큰 담요 1매(150cm*150cm)+가제 손수건 4장

○(지원 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격)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 필요

□ 다자녀 고양이카드 사업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지원 내용)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 제공

- 4대국, 종묘, 조선왕릉 등 입장료 전면 감면

- 가명 안과, 안경점, 테마파크/박물관/동물원/아쿠아리움/극장 등 문화시설, 아울렛/공영주차장 등 할인혜택

○(사용 기간) 신청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발급)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2) 용인시

□ (사회수당) 다자녀 가구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²⁾

○(지원 대상) 2023.01.01.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를 용인시에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 포함)

○(지원 조건)

- 1.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거주

- 2.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입양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신청 기간: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방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신규 교통카드 즉시 지급

(3) 창원시

□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2) 용인시청 홈페이지, 2024.03.24. 인출

○(지원기준)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90% 본인부담금10%
-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지원금 70% 본인부담금 30%
- 3등급(중위소득 120%이상): 지원금 30% 본인부담금 70%

○(지원 내용)

- 이용 시간: 08시~20시(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가능)
- 지원 한도: 연간 60시간 이하(1인)
- 내용: 기본간병 외 놀이지원, 책 읽어주기 등 돌봄활동
- 이용 가격: 1시간 13,000원(지원금 + 본인부담) ※ 3등급차등지원
- 추가 이용 시 본인부담 100%

(4) 성남시³⁾

□ (사회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 내용)

- 단태아: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다태아: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 (사회수당)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빠 또는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첫째, 둘째)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필수)

□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거주기관 무관)

○(지원 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3) 성남시청 홈페이지, 2024.03.23. 인출

국외사례

- 국외사례는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를 임신·출산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 사업, 양육 지원 사업, 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분야별로 목록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함

- 특히, 해당 목록 중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과 직접인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수원시 자체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은 주로 임신 과정이나 출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자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돌보거나 가사와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주를 이룸

□ 임신 출산 지원 사업

○ 출산 육아 응원 지원금

- 모든 임신부 육아세대가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반주(伴走)형(옆에서 함께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안내하는 지원 형태) 지원을 확충하고 있음
- 임신부 등록 시(임신 8개월 전후) 출생신고부터 신생아 가정 방문시기까지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소속의 보건사와 조산사와 같은 전문직원이 방문하여, 임신부 혹은 자녀의 양육자와 면담을 통해 함께 출산 및 육아에 관한 계획을 세움.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 시 배우자, 파트너, 혹은 동거 가족도 함께 면담할 것을 권장
- 상담 시 임신부 등록 시 면담 진행 후 5만엔 상당의 출산 응원선물을 지급하고, 출생신고부터 가정 방문 기간 중 면담 진행 후 5만엔 상당의 육아 응원선물 지급

○ 출산 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신주쿠구)

- 신주쿠구에서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을 사용하여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면담 및 지원금 지급 실시

○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도쿄도 히노시)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조산사가 스마트 폰을 통해 24시간 대응해주는 온라인 건강 상담제도
 - 2022년 8월~2023년 3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도쿄도 히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으며, 난임/산부인과 질환/유산 사산 등에 관한 상담도 가능
 - (24시간 상담) 24시간 웹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질문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
 - (야간 상담) 온라인 채팅, 음성통화 및 영상 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회당 10분씩 예약제로 운영

○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

- (이용대상) 교토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교토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산모 중에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심신 돌봄이 필요한 자
 - 출산 후 회복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산후 관리가 필요하며, 수유나 목욕 방법 등에 불안감을 느껴 상담, 조언, 지도 등이 필요한 자
 -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는 제외됨([표 13] 참조)

[표 13]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구분	시간	지원 내용
출산 후 단기체류	원칙상 이용시작 후 24시간 이내의 이용을 1일로 계산	1. 모체 관리 및 생활 상담 및 지도 2. 유방 관리, 유방 문제 해결 3. 성장 및 발달 체크 4. 체중 및 배설 체크 5. 피부 관리 6. 수유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지도 7. 목욕 수행 및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지도 8. 가정에서의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출산후 데이케어	원칙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1일로 계산	9. 상담 등 심리적 케어 10. 이유식에 관한 조언 및 지도 11. 기타 필요한 보건 상담 및 지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p.11~13

□ 일·가정 양립 사업

○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스미다구)

- 임신 중이나 영아기(0세~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서포터를 파견해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스미다구는 스미다구에 주소가 있는 임신 중이거나 영아(0세~2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제휴한 서포터 파견사업자에게 해당 바우처 지급
 - 가사 지원: 취사, 세탁, 청소, 쇼핑
 - 목욕 보조: 목욕 준비, 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수유와 식사 보조: 우유 만들기, 수유, 식사 보조 등
 - 자녀 돌봄: 기저귀 교체, 옷 갈아입기, 놀이 등
 - 형제자매 돌봄: 취학 전 나이인 형제, 자매의 옷 갈아입히기, 놀이 등
 - 동행 지원: 쇼핑, 병원, 공공 기관 수속 등

□ 양육 지원 사업

○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시즈오카 시)

- 시즈오카시에 거주하며 임신 중 체력 저하로 가사나 육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후 1세 미만 자녀 혹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생활 및 육아 등 지원

- 모자 건강수첩 교부 후 도우미 파견 사업 이용자 등록을 각 국청 육아지원과에 제출하고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이용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자체와 계약한 사업자에게 연락해 예약
- 지원 내용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및 정리, 의류 세탁, 수선, 생활공간 청소, 정리 정돈, 생필품 쇼핑, 관련 기관과의 연락 등
 - 육아 지원: 수유, 기저귀 교환, 목욕, 적절한 육아 환경 정비 등
-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해당 자녀가 만 1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30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은 만 3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30회 이용할 수 있음. 임신부는 출산일까지 총 20회 이용 가능
- 이용자 부담금은 시간당 900엔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은 무료로 이용 가능([표 14] 참조)

[표 14] 일본 주요 육아정책 사례(2023)

구분	주요 사업
임신 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 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 • 일과 불임치료의 병행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출산 후 지원사업) • 아동 미래 전략 방침 •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 아동발달지원사업소 등 이용 지원 사업(둘째 자녀 이후 무상화) • 불육증 검사비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 • 양립지원 등 지원금 제도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 샷포로 부모-자녀 그림책 교류사업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정비사업(아이와 함께하는 외출 사업) •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
유아교육/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등의 디지털화 추진사업 • 입학 준비금 신청 • ‘아동 등하원 제도(가칭)’ 시범 사업 실시를 위한 검토회 개최
아동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와 연계한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 • NPO 등과 연계한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 • 샷포로 아동 심리 진료 네트워크 사업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p.3~46
 주: 볼드체로 된 사업들이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 사업임

2) 미국

- 미국은 주로 연방정부 단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수립하여 발표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주로 시행됨
 - 이 중 수원시의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미국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임

□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 2023년 9월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부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센터를 설립함. 아동가족부는 5년 동안 매해 400만 달러씩 투입하여 어린이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및 훈련 방법을 개발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제공할 예정
-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의 조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 및 정신건강 인력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
 - 기술 및 증거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전문가와 정신건강 전문가 간의 조정 강화([표 15] 참조)

[표 15] 미국 주요 육아정책 사례(2023)

구분	주요 사업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전국 보육료 데이터를 통해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산출
유아교육/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최초의 보육·교육 인력센터 출범 발표 •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전문 개발 시스템 • 보육 시스템 강화 등 50가지 지시사항을 포함한 행정명령 발표 • 2022년 가을 학기 어린이집(Preschool) 이용률 보고서 • 보육교직원 이직에 관한 보고서 • 지방 보육 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안 발의 • 시간 외 보육법(After Hours Child Care Act) 발의 • 보육 접근성, 경제성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정 제언 •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비 절감 및 어린이집 이용을 높이기 위한 법안 발표 • 뉴저지 주 애보트 프리스쿨 프로그램 품질에 관한 보고서 • 미국 교육부, 유치원 학습 공동체 출범 발표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개정안 발표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장애 아동 포함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성명 발표
아동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최초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설립에 2천만 달러 지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p.47~74

주: 볼드체로 된 사업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3) 독일

□ 독일은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 제도를 발표하거나 현 실태를 파악해 문제를 진단하는 정책 사례들이 다수를 이룸. 수원시 저출산 정책 개발을 위해 눈여겨볼 만한 사례는 중앙정부에 수립된 “언어-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단위로 확대된 것과 초등학교 돌봄 종일반에 대한 확대 프로그램임

□ 언어-어린이집 프로그램

- 언어-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의 언어발달 향상을 위해 2016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 융합된 언어 습득’, ‘포괄적 교육’, ‘가족 참여’를 강조
- 연방정부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2021년부터는 미디어에 노출된 영유아 아동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과 미디어 교육을 언어교육과 통합하여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23년부터 연방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 인계하고 시행하게 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언어-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시범 사업에서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완되어 운영할 수 있음
- 연방정부는 향후 40억 유로를 지방정부에 지원할 예정이며, 2개의 연방주를 제외한 지방정부가 “언어-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 단위에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예정

□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 프로그램 확대

- 초등학교 종일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가족부 장관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함. 연방가족부 장관은 ‘양육자는 종일반 돌봄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권한의 실행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종일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초등학교 돌봄 종일반 운영은 아동의 불평등한 교육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 독일은 2021년 종일반 지원법(Ganztagsförderungsgesetz: GaFöG)을 수립하여 초등아동이 종일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조
- 2026년~2027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종일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2029~2030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 연방정부는 연방주에 3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시작했고, 각 주는 이 재원을 활용해 건물 및 토지 취득, 건물의 신축/개조/확장, 건물의 운영,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음([표 16] 참조)

[표 16] 독일 주요 육아정책 사례(2023)

구분	주요 사업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가족 정책 개선 •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카탈로그 출시 • 독일의 아동빈곤 퇴치 •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의 체결 • 유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보고 • 가족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유아교육/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환경 개선 • 2023년 6월까지 독일 연방정부가 6,000개의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지원 •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등록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인력난 인지 및 개선안 강구
아동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이후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확대 •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지원 • 독일학교 전역에서 아동 빈곤, 일반·직업학교 교사의 시간제 근무 관련 설문조사 실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 초등학교 종일반 확장 투자프로그램의 시작 • 아동 돌봄의 꾸준한 증가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p.75~116

주: 볼드체로 된 사업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스웨덴

□ 스웨덴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다수 시행하고 있음

- 가령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줄이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며, 유치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임
- 특히 스웨덴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아동들을 위한 언어 프로그램 향상과 디지털 학습 도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유치원 내 디지털 학습도구 사용에 관한 조건 변경

- 스웨덴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량을 늘리는 것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학교에서 미디어 시청시간을 줄이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미디어 시청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

□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도구에 대한 교육청의 새로운 과제

- 스웨덴 정부는 읽기, 쓰기, 계산능력과 같은 아날로그 활동 및 환경이 아동의 능력, 주의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주로 물리적인 책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학습도구는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을 제안([표 17] 참조)

[표 17] 스웨덴 주요 육아정책 사례(2023)

구분	주요 사업
유아교육/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및 교장들의 국가 직업전문 프로그램의 설계에 참여 • 학교에서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확보 • 정부보조금이 유치원의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조정 •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교사 및 유치원 교사양성과정 개혁 • 학생들의 초기 언어 발달에 위한 더 나은 후속 조치 시행 • 정부의 유치원 내 디지털학습도구 사용에 대한 조건 변경 •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 도구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조직범죄방지위원회의 개입 집중 • 장기 결석 예방을 위한 정부의 학교사회팀에 투자 • 아동보건협회의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의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보건프로그램 개발 • 정부의 교육청 학생결석조사 임무 부여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p.139~164

주: 볼드체로 된 사업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04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요약

1) 수원시 저출생 현황 분석

□ 수원시 저출생 현황

- 수원시의 합계출산율 0.68명을 기록하며 극단적 저출생 현황을 보이고 있음
 - 5년 전인 2018년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에 근접하였는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0.89명, 2020년 0.80명, 2021년과 2022년 0.77명, 그리고 2023년 0.68명에 그쳐 주요도시 중 최하위권임
- 수원시 연령별 출산율 수준에 따르면 25~29세 여성 1,000명당 19.3명의 출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 출산율이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특징을 보임
- 수원시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코로나-19 기간에 감소하다가 2023년 들어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함
- 수원시의 조출생률은 5.6명으로 경기도 평균 수준임

2) 양육 지원 정책 사례 분석

□ 중앙정부 양육 지원 정책

- 정부는 저출산에 다방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행계획의 방향을 변경하였음
- 중앙정부는 공보육 및 보육 서비스,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관리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을 체계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돌봄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3 부모 육아휴직제나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함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출산 및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세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임신 및 출산진료비,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늘렸음([표 18] 참조)

[표 18] 중앙정부 양육 지원 정책

구분	정책과제	주요 세부과제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육 강화 •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긴급돌봄 체계화, 시간제 보육 확대 • 늘봄학교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지원 신설 및 확대 • 출산 후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사회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용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영아수당), 첫만남꾸러미,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 • 자녀장려금(CTC) 세제 지원 및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정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공통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수원시는 출산과 관련하여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산 이후 산모나 아동에게 현금 혹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수원시는 양육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현금성 급여나 수당을 제공하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또한 존재함
- 고양시는 사회수당 외에 사회부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사 지원, 출산지원금을 통해 현금성 사회수당 지급, 다복꾸러미 지급을 통해 현물성 사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외에 저소득 미혼모·부가족의 양육 생계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고양e카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용인시는 다자녀 가구 출생 축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창원시는 병원아동돌봄 서비스를 지원함
- 성남시는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을 사회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임([표 19] 참조)

[표 19] 지방정부 양육 지원 정책

지역	주요 정책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 지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0세~5세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지원 사업, 시간제보육 사업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수당: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사 지원, 출산지원금, 다복꾸러미 지급 사회부조: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 생계비 지원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수당: 다자녀 가구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창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국외 양육 지원 정책

- 일본은 크게 지방정부에서 임신·출산지원 사업과 일·가정 양립 사업, 양육 지원 사업을 펼쳐 가사와 육아를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는 출산 육아 응원 지원금,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등이 있음
 - 일·가정 양립 사업에는 가사 및 육아 서포터 사업이 있음
 - 양육 지원 사업에서는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 단위의 법안을 수립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를 설립한 점이 특징적이었음
- 독일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언어-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되어 지방으로 확대되었으며,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장되었음
- 스웨덴은 디지털 시대 교육에 사용되는 학습도구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유치원 내에서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독서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학습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지침에 따라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음([표 20] 참조)

[표 20] 국외 주요 양육 지원 정책

지역	구분	주요 사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최초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설립에 2천만 달러 지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6월까지 독일 연방정부가 6,000개의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지원

지역	구분	주요 사업
독일	• 돌봄	•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초등학교 종일반 확장 투자프로그램의 시작
스웨덴	• 유아교육/보육	• 정부의 유치원 내 디지털학습도구 사용에 대한 조건 변경,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 도구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수원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경기도 공통 사업으로 함께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책 외에 수원시 인구구조의 특징과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 구별로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고,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각 연령별로 필요한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예: 지역별 산업자원, 문화자원, 교육자원)을 파악하여 시민의 수요와 자원을 결합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사회수당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원시가 새로운 정책 개발 시 이와는 차별적으로 일대일 개별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금 혹은 현물성 사회수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맞춰서 다수 시행되고 있고, 해당 사업은 경기도 공통 사업으로 이미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책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원시와 유사한 지방정부에서도 주로 현금성 사회수당 정책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출범한 수원시는 이와 차별화된 수원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별적 지원의 방식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국외 중 일본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주형(직접 방문하고 면담해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멘토링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수행) 정책이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육아와 가사 지원뿐 아니라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에서와 같이 정신건강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음
 - 이에, 수원시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육아 상담 서비스, 양육자와 아동의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교육 지원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음
 -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종일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늘봄 학교 시행과 같이 초등학교 돌봄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수원시에서 수원시형 지역사회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 지원센터. (<https://www.swescc.or.kr/>)
- 경기도 뉴스포털. (<https://gnews.gg.go.kr/>)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https://ggmaeul.or.kr/base/main/view>)
-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https://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40102104934340 &q_currPage=1&q_pCIcode=)
- 고용노동부. (2022.01.26).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 (2024).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01.05.(금).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2021~2025).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부.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1권(중앙정부).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부.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2권(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정부
- 미디어와이. (2024.01.16.). 보도자료. <https://www.mediawh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90>
- 보건복지부. (2024). 2024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3020000>)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city/1000647/16/10485/subTabCont.do?>)
- 수원시. 내부자료
- 수원시. (2018, 2019, 2021, 2022, 2023).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 수원시 보건소. (<https://health.suwon.go.kr/>)
-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wchildcare.or.kr/>)
- 수원특례시 발달장애 종합정보 시스템 새빛이음. (<https://www.suwon.go.kr:22861/>)
-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index.do>)
- 시도 및 교육청.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교육청
-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 (2013). 자녀 양육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합뉴스. (2023.05.17.). 인구학 권위자 "한국 저출산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7059400530>
-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5/www01_05_05/www01_05_05_13.jsp)
-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3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 이선형. (2022).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개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03.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통계청.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동향조사

